



전년도 수준으로 보상 ... 지방비 추가

전남도, 오리휴지기제 보상금 추가지원



전라남도의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 보상금이 전년도 수준인 육용오리 마리당 815원, 종란폐기보상 개당 600원으로 책정됐다.

현행 육용오리가 마리당 782원, 종란폐기보상이 개당 472원인 것에 비하면 높은 가격이다.

협회 전영욱 전남도지회장은 “올해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보상금이 전년도 수준으로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전남도청에 건의한 결과, 기존의 보상금에서 육용오리 마리당 33원, 종란폐기비용 개당 128원이 지방비로 추가 지원되도록 결정됐다”며 “오리 농가를 위해 추가지원 결정을 해준 도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리 농가도 시방역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강진군민장학재단에 쾌척

협회 강진군지부장 및 회원 장학금 기탁



지난 10월 26일 한국오리협회 전남지회 강진군지부장 김정배 양명자연농장 대표가 2백만 원, 강진군 지부 회원들이 1백만 원의 장학금을 강진군민장학재단(이사장 이승욱)에 기탁했다.

강진군지부장인 양명자연농장 김정배 대표와 강진군지부 회원들은 강진 교육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1천 7백만 원의 장학금을 재단에 매년 기탁해 오고 있다.

김정배 지부장은 “강진 오리농가를 성원해주는 군민께 감사의 마음을 매년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에 올해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강진군 발전을 이끌 인재 육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욱 강진군민장학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농가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중에도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데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기금 운용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민장학재단은 올해 2억 1,5095만 원의 장학금이 모금됐으며 현재까지 171억 8,5930만 원의 인재육성기금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김광배 경기도지회장 농수축산신문 인터뷰



“10여년 전만해도 안성에만 오리농가가 80농가였는데 지금은 9농가만이 남았습니다. 경기도에만 150농가였던 오리농가가 30농가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리산업이 축소되는 것은 지자체의 정책탓이 크다고 봅니다.” 김광배 경기도지회장은 농수축산신문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광배 한국오리협회 경기도지회장은 낙농업을 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연암대에서 축산학을 전공하고 양돈장을 운영했고 수정사로 일하는 등 축산업에만 종사해온 축산통이다. 17년째 오리를 키우고 있는 그는 경기도의 오리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까운 충청도만 해도 겨울철에 사양관리가 안되고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위험도가 높은 농가만 휴지기를 하도록 하고 다른 농가에는 연료비를 지원해서

면역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오리산업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역은 방역대로 하고 산업은 산업대로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기도는 무조건 휴지기에 들어가라는 식입니다. 오리를 키우지 않으면 질병이 오지 않을 것 아니냐는 식입니다. 이것은 문제죠.”

김 지회장은 경기도가 오리산업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오리산업 종사자들이 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리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방역의식을 고취해서 산업이 나갈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경기도는 사실 전체적인 축산지원 자금도 많고 축산업에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데 반해 오리산업에 대해서는 홀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의 오리농가들은 정책적 외면속에서도 오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줬으면 합니다.”

김 지회장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리를 키울 것이라며 경기도의 오리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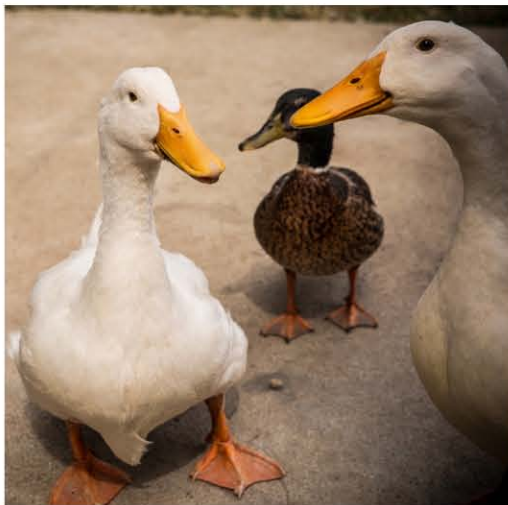
“저는 오리가 잘 맞아요. 오리 키우는 것이 천직이고요. 경기도에서 오리산업이 다시 부흥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 것입니다.”

〈사진 : 월간 오리〉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

충북 오리휴지기제 참여율 매년 절반 넘어



충북에서 겨울철 오리 휴지기제에 참여하는 농가가 매년 50%를 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효과가 큰 만큼 참여율이 꾸준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오리 휴지기제 참여를 신청한 도내 농가는 51곳이다. 전체 육용오리 사육농가 98곳 중 52%이다.

도는 11월 초까지 신청을 받으면 참여 농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충북은 2017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오리 휴지기제를 도입했다. 이후 참여 농가는 해마다 50%를 웃돌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7년은 농가 136곳 가운데 86곳이 참여해 63.2%를 기록했다. 2018년 육용오리 농가 128곳 중 69곳(54%), 2019년 119곳 중 68곳(57.1%)이 휴지기제에 참여했다.

지난해는 참여율이 가장 높다. 농가 109곳 가운데 74곳(67.9%)이 동참했다. 그해 참여 농가가 늘면서 육용오리 농가에서는 시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오리 휴지기제 참여율이 매년 육용오리 농가의 절반을 넘는 것은 AI 발생 차단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보상금이 오르며 현실화한 것도 영향을 줬다. 올해 오리 1마리당 보상금은 782원이다. 지난해 815원보다 줄었지만 2017년 510원보다 272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오리 휴지기제가 열악한 사육 시설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만큼 임시방편의 방역 정책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오리업계에서 AI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생산 시설을 개선해 AI 등 질병을 예방하고, 사육 농가에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시각에서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도 관계자는 “AI 예방 효과가 높은 오리 휴지기제의 도내 참여율은 전국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AI 차단을 위해 참여율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시>

닭·오리 수입검역 강화



새로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외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이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지난 10월 14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 질병' 3종(토끼출혈병·토끼점액종증·야토병) 추가하고, 야생동물 축종별·전염병별 잠복기 고려 검역기간 설정해 토끼목 15일·식육목 10일·박쥐 180일로 잠복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역류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오염 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포함했으며, 살처분을 명령대상에 제1종 가축전염병인 '뉴캐슬병'을 추가했다.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도 개선됐다.

중계무역 방식의 검역물이 수입 허용 지역산이고, 실온 보관·유통이 가능한 것에 한 해 검역증명서 첨부 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광견병' 혈청검사 수수료도 현실화돼 현행 5만5천원이던 수수료가 11만원으로 2배 증액됐다.



경천섬 일원 19m 초대형 오리 띄워

낙동강 오리알 특별전시 제2탄



경북 상주시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경천섬 일원에서 '낙동강 오리알'을 테마로 한 조형물을 전시했다. 낙동강 수상에 길이 19.5m, 높이 16.2m 규모의 초대형 엄마 오리와 알에서 부화한 새끼오리 4마리가 전시되며,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올해 봄 전시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이번 가을 전시의 주인공은 알에서 깨어난 귀요미 새끼오리들이다. 깜찍하고 귀여운 모습의 새끼오리들 가운데 빨간 머리띠를 한 까무잡잡한 오리가 눈에 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운오리새끼와는 사뭇 다르게 엄마의 사랑을 가득 받은 듯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다.

또, 상주시는 전시 행사와 함께 경천섬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낙동강 오리알 탐사선'을 운행할 계획이며, '미운오리새끼와 친구가 되어주세요!'라는 주제의 SNS 경품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특별전시를 통해 '외톨이', '왕따'로 상징되던 낙동강 오리알이 당당히 알을 깨고 나와 가족과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이번 전시에 이어 내년에도 이색적인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전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